

##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(TF)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4.19)

- 지금부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(TF)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·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  - \* 수출 증가율(전년 동기비, %): △10.0('22.4/4), △16.4('23.1월) △7.5(2월) △13.6(3월)
- 이에 민간의 수출·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오늘 회의에서는 ①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②국가계약 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.

### [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]

- 먼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으로,
  -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,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·개선하겠습니다.
    - 글로벌 제약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결하여 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,
    -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 41개 과제를 개선하겠습니다. 사례를 말씀드리면,
  - ① 글로벌 제약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하였으나,
    - 정부가 규제·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안부지를 탐색·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하였으며, 해당 기업은 지자체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  - ②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(ESS)는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되어 발전용량이 1만kW(킬로와트) 미만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었으나,
    - 앞으로는 태양력·풍력·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kW(킬로와트)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습니다.

③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\*시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 하나, 기업들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전(全) 공정 설비의 도면제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

\*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자료,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·제출하고, 안전보건공단 이 이를 심사

- 이에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\*를 선정하여 도면을 작성·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입니다.

\* 동일 모델 중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종류가 가장 많은 설비

[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]

□ 다음으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입니다.

□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, 입찰참가업체가 50만개 수준으로 증가\*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

\* 공공조달시장 규모(조원) : ('17) 137.2 → ('19) 160.0 → ('21) 184.2  
조달청 입찰참가업체(만개) : ('17) 37.4 → ('19) 43.4 → ('21) 50.3

□ 이에 정부는 업계·전문가·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주요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,

① 먼저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\*하고, 소방·군·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 장비의 낙찰하한율\*\*을 현행 60%에서 80%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\* (요건) 특정규격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%를 초과&가격증가율이 15% 이상 등  
(現) 특정규격 자재가 공사비의 1% 초과 → (改) 공사비의 0.5% 초과

\*\*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최소 비율

- ②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\*,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\*\*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\*\*\*하여 중소기업의 입찰·계약절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.

\* (現)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기간 중 임의시점 → (改) 입찰공고일

\*\*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, 입찰가격,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(중소기업의 입찰비용 부담 문제 등 제기)

\*\*\* (기본설계) 15→30억원, (실시설계) 25→40억원, (건설사업관리) 20→50억원

- ③ 턴키 입찰(설계·시공 일괄 입찰)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\*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.

\* (現)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 설계보상비 지급 → (改)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지급

- ④ 공기업·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발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.

- ☐ 향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.

#### [ 향후계획 ]

- ☐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며,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.

- 이에 매월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(TF)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·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.

- ☐ 또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과제와 함께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기대한 규제개혁 효과가 나타나는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- ☐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 
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